제103호(2015. 4. 9.)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

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1. 개요 ····· 1
2. 귀농·귀촌 추세와 특징 ····· 3
3. 농촌 인구 전망과 시사점 ····· 8
4. 정책 과제 ·····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02-3299-4236 hskim@krei.re.kr
내용 문의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02-3299-4121 mrsong@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2-3299-4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약

○ **농림축산식품부 및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도 귀농·귀촌 가구는 총 44,586호로 2010년의 4,067호 대비 10배가량 증가**

- 귀촌 가구 비율이 2012년 58.5%에서 2014년 75.1%로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귀농보다는 귀촌 가구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
- 귀농·귀촌 가구당 인원도 2012년 1.75명에서 2014년 1.8명으로 증가 추세

○ **전반적으로 전 연령대에서 귀농·귀촌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60대 이상의 은퇴 연령층보다는 30대 이하, 40대, 50대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도시 근교의 특정 지역이 우세했던 귀농·귀촌 목적지도 전국적으로 확대

○ **귀농·귀촌 추세가 최근처럼 지속될 경우 20년 후 농촌 인구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전망**

- 향촌 인구이동이 최근의 추세대로 지속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2013년 930만 명(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인 농촌 인구는 2033년에는 9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중장년층 중심의 인구 유입으로는 농촌의 인구 감소를 부분적으로 늦출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농촌의 인구 기반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인 농촌 인구는 감소 국면으로 반전될 가능성

○ **농촌이 갖는 가치와 내면적 풍성함 추구 등 '탈근대적 가치'에 기초한 농촌 이주 현상은 선진국의 공통 트렌드임**

- 농촌의 총량적 인구 증가 여부는 국가마다 약간 다른 양상이나, 농촌만의 가치를 추구하여 도시민들이 유입하는 현상은 공통적인 현상
- 또한 자연환경, 기후, 수자원, 문화·역사자원 등 어메니티를 갖춘 곳일수록 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별 여건 차이가 농촌 인구 변화에 중요하게 작용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들을 제시**

- 귀농인을 지역농업의 승계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 추진
- 교육훈련, 창업자본지원, 인턴십 등 젊은 귀농·귀촌인을 배려하는 전략 필요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교육, 문화·여가,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분야 활동에 귀농·귀촌인 참여 확대
- 농촌 이주 도시민과 기존 주민의 정주기반을 통합적으로 확충

1. 개 요

▫ 2014년 귀농·귀촌 인구이동 급격히 증가

○ 농림축산식품부 및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도 귀농·귀촌 가구는 총 44,586호로 나타남. 이는 유사한 방식의 조사가 시작된 2012년도와 비교해볼 때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것임[1)]

○ 귀농보다 귀촌 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나홀로 귀농·귀촌보다는 가족 단위 이동이 특징적임. 지역적으로는 특정 지역 중심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임. 귀농·귀촌자의 연령이 젊어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 인구이동의 요인 분석 및 전망 필요

○ 전통적인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에 따르면 귀농·귀촌 인구이동은 도시의 압출요인(push factors)과 농촌의 흡입요인(pull factors)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도시의 높은 주택 가격, 고용불안정과 같은 압출요인과 더불어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거주지 선택의 제약 완화,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가치관과 생활양식 변화로 농촌의 흡입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귀농·귀촌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더욱이 2005년부터 본격화되었던 귀농·귀촌 촉진 정책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추세가 일시적인 것인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한편, 세계적인 트렌드 분석 등을 통한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귀농·귀촌 인구이동 대폭 증가”

1) 2011년까지는 지자체를 통한 행정조사 결과를 통해 집계한 자료이며 귀농 가구와 귀촌 가구 및 세대주와 세대원을 구분하지 않은 자료였음. 그러나 2012년도부터 농식품부(귀촌 행정조사)와 통계청(귀농 통계조사)이 각각 조사한 후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이고 세대주와 세대원을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음.

귀농·귀촌 증가 요인을 분석하여 농촌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정책 발굴 필요

□ **귀농·귀촌 인구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 농촌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 필요**

○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므로 귀농·귀촌 인구이동은 농촌뿐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의 의미있는 단초임

○ 귀농·귀촌 인구이동을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시키고 귀농·귀촌 인구가 기존 주민과 융화되어 농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을 고려해야 함

2. 귀농·귀촌 추세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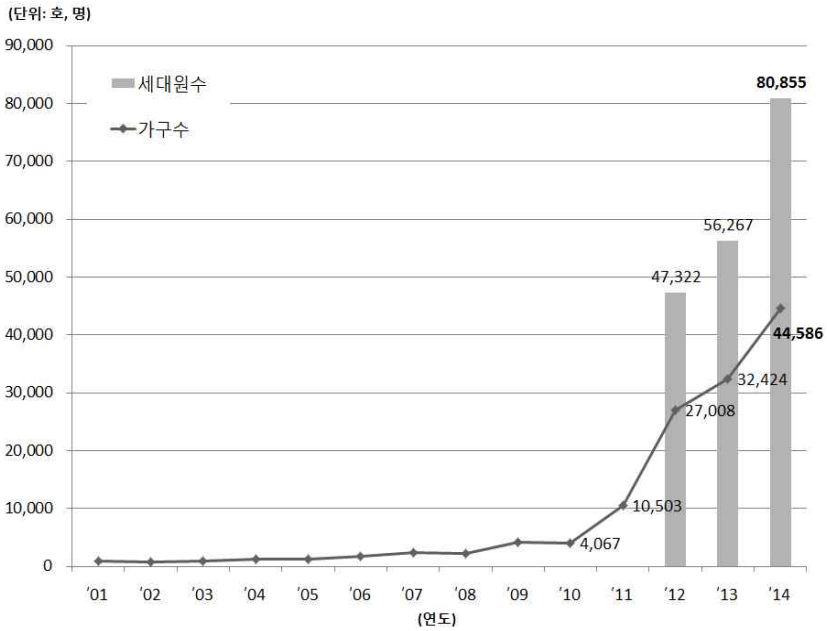
▫ 2010년 이후 급격한 귀농·귀촌 증가 추세

○ 농식품부 및 통계청의 최근 집계 결과를 보면, 2014년도 귀농·귀촌 가구는 총 44,586호로 2010년의 4,067호 대비 10배가량 증가함

- 이 중 2014년 귀농 가구는 11,144호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의 귀농 가구 수(1998년 6,409호)[2]보다 많은 숫자임

○ 2012년 대비 2014년에는 귀농·귀촌 가구의 세대원도 약 71% 증가한 81,000명 수준으로, 귀농·귀촌 가구당 인원도 1.75명에서 1.8명으로 증가함

그림 1. 연도별 귀농 · 귀촌 추이



▫ 귀농보다는 귀촌 인구 증가 우세

○ 2012년부터 귀농 가구와 귀촌 가구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전남, 경북, 제주는 귀농 가구가 소폭 증가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귀농보다는 귀촌 가구가 크게 증가함

"2010년 이후 급격한 귀농·귀촌 증가 현상 지속"

2) 김정섭 외. 2012.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농정포커스』 제13호.

- 전국 귀농 가구 비율: ('12) 41.6% → ('13) 33.7 → ('14) 25.0
- 전국 귀촌 가구 비율: ('12) 58.5% → ('13) 66.4 → ('14) 75.1

□ 귀농·귀촌 목적지의 전국적인 확대

○ 전체 귀농·귀촌 가구의 목적지 중 경기, 강원, 충북, 경남의 비중은 다소 낮아졌으나,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의 비중은 높아졌음

- 도시 근교의 특정 지역 중심에 치우쳤던 귀농·귀촌의 목적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귀농보다는 귀촌 우세, 특정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

표 1. 광역시·도별 귀농·귀촌 변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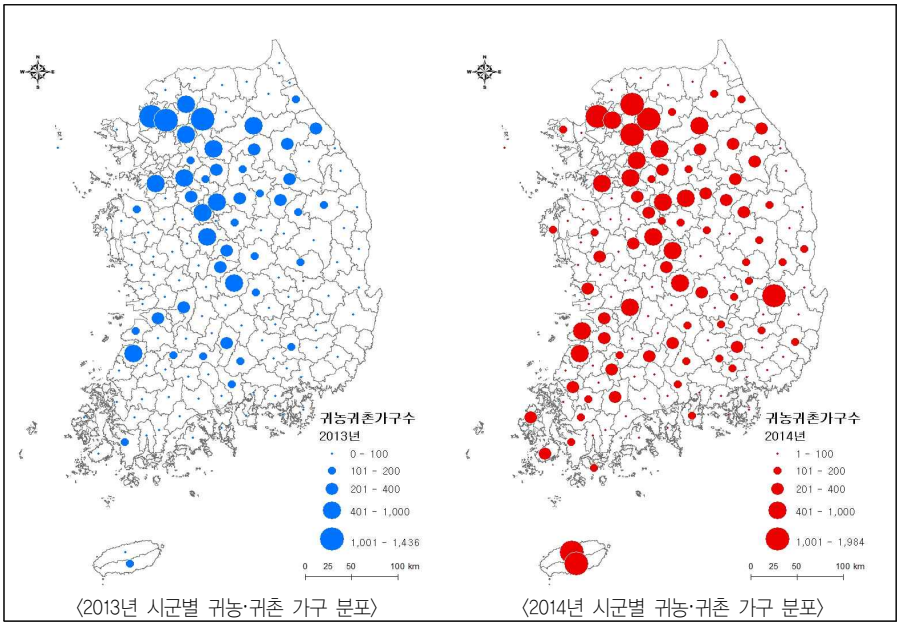
단위: 호(%)

	2012년		2013년		2014년	
	귀촌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귀농
합계	15,788 (100)	11,220 (100)	21,501 (100)	10,923 (100)	33,442 (100)	11,144 (100)
광역	62 (0.4)	346 (3.1)	85 (0.4)	329 (3.1)	571 (1.8)	343 (3.1)
경기	6,644 (42.1)	1,027 (9.2)	8,499 (39.6)	931 (8.6)	10,149 (30.4)	947 (8.5)
강원	2,786 (17.7)	972 (8.7)	2,846 (13.3)	875 (8.1)	2,960 (8.9)	812 (7.3)
충북	2,897 (18.4)	918 (8.2)	4,046 (18.9)	872 (8)	4,238 (12.7)	906 (8.2)
충남	319 (2.1)	1,214 (10.9)	679 (3.2)	1,177 (10.8)	1,321 (4)	1,237 (11.2)
전북	990 (6.3)	1,238 (11.1)	1,782 (8.3)	1,211 (11.1)	3,081 (9.3)	1,204 (10.9)
전남	313 (2)	1733 (15.5)	681 (3.2)	1,825 (16.8)	2,499 (7.5)	1,844 (16.6)
경북	1,015 (6.5)	2,080 (18.6)	1,409 (6.6)	2,087 (19.2)	3,345 (10.1)	2,172 (19.5)
경남	687 (4.4)	1434 (12.8)	1,270 (6)	1,348 (12.4)	1,709 (5.2)	1,373 (12.4)
제주	75 (0.5)	258 (2.3)	204 (1)	268 (2.5)	3,569 (10.7)	306 (2.8)

자료: 통계청(각 연도), 귀농귀촌인 통계.

○ 시·군별 귀농·귀촌 가구의 분포를 보면 2013년에는 수도권 및 충북에서 귀농·귀촌이 많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2014년에는 주요 귀농·귀촌 목적지가 수도권과 충북만이 아니라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지역 시·군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임

그림 2. 시·군별 귀농·귀촌 가구 분포 변화(20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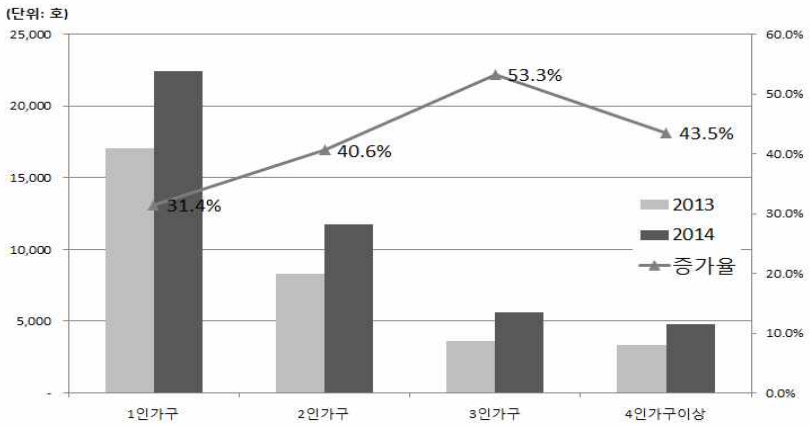
〈2013년 시군별 귀농·귀촌 가구 분포〉 〈2014년 시군별 귀농·귀촌 가구 분포〉

▫ 가족 단위의 귀농·귀촌 증가

○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2인 이상 귀촌 가구가 40.6%, 3인 이상 귀촌 가구가 53.3%, 4인 이상 귀촌 가구가 43.5% 증가함. 나홀로 귀촌은 감소하고 가족 단위 귀촌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음

- 1인 가구 비율: ('13) 52.7% → ('14) 69.3
- 2인 가구 비율: ('13) 25.7% → ('14) 36.2
- 3인 가구 비율: ('13) 11.3% → ('14) 17.3
- 4인 이상 가구 비율: ('13) 10.4% → ('14) 14.9

그림 3. 귀농·귀촌 가구 구성의 변화



자료: 통계청(각 연도), 귀농귀촌인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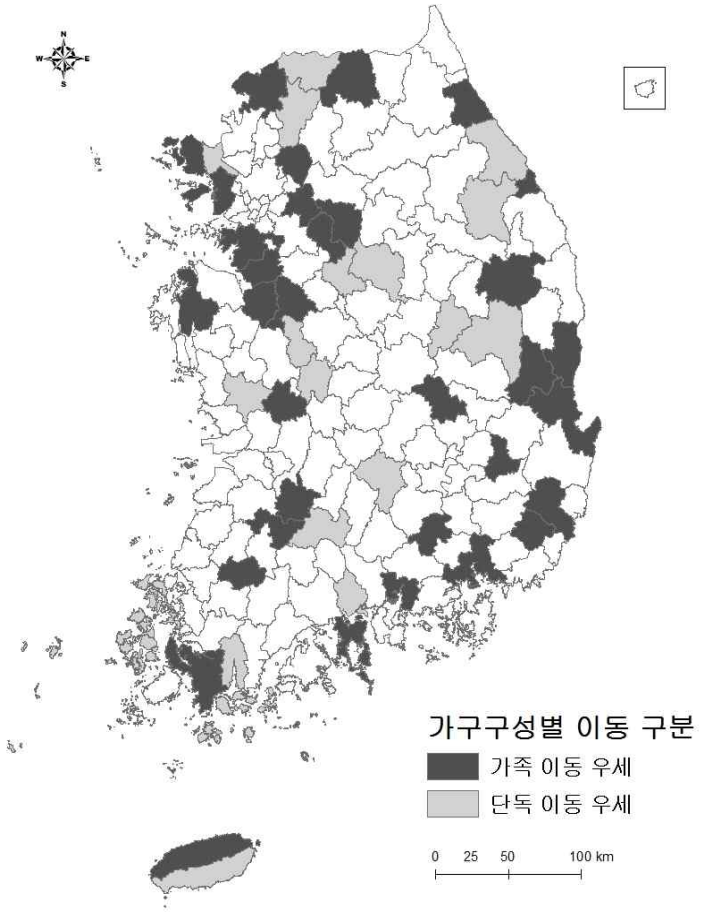
"가족 단위 귀농·귀촌 증가"

○ 특히 대도시 주변 지역에서는 가족이 함께 귀촌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2014년 기준으로 2인 이상 세대원으로 구성된 가구가 시·군별 귀촌 가구 중 70%를 상회하면 '가족 이동 우세'로, 1인 단독 가구가 70%를 상회하면 '단독 이동 우세'로 구분하여 지도화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대도시 주변 지역 농촌에서는 가족 동반 귀촌 경향이 더욱 우세

그림 4. 시·군별 가족 이주 및 단독 이주의 귀촌 분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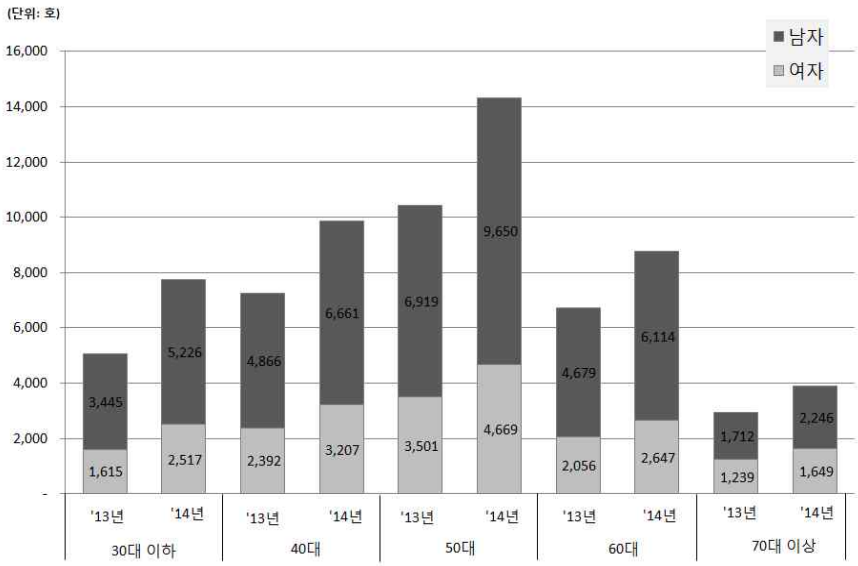
□ 젊은 귀농·귀촌자 증가 추세

○ 귀농·귀촌자들의 연령이 젊어지고 있다는 것도 변화된 추세임

○ 201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전 연령대에서 귀농·귀촌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0대 이상의 은퇴 연령층보다는 30대 이하, 40대, 50대의 귀농·귀촌자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생산성 높은 젊은 계층이 귀농·귀촌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은퇴 연령층 중심의 귀농·귀촌에 비해 농업 승계, 농업 관련 비즈니스 참여를 촉진시키고 농촌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고무적임

그림 5. 연령대별 남녀 귀농·귀촌 가구 수 변화



자료: 통계청(각 연도), 귀농귀촌인 통계.

귀농·귀촌자들의 연령이 젊어지고 있는 추세

3. 농촌 인구 전망과 시사점

▫ 귀농·귀촌 추세가 최근처럼 지속될 경우 20년 후 농촌 인구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전망

○ 최근의 귀농·귀촌 증가 추세에 따라 농촌 인구가 어떻게 변화할지 연령별 출산율, 사망률 등과 도농 간 인구이동률 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봄[3)]

-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코호트 요소법(Cohort component method)으로 농촌 인구를 추계, 자연 증감뿐 아니라 사회적 증감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연령대(5세 기준)별 농촌으로의 이동률을 적용하여 예측함
- 인구이동률은 상위, 중위, 하위 세 개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며, 상위 시나리오는 최근 10년(2003~2013년) 동안 인구이동률 수치를 기준으로 높은 인구이동률 값이 향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함
- 반대로 낮은 인구이동률 값을 적용한 것이 하위 시나리오이며, 이 두 가지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 중위 시나리오로 구분됨

"현재의 귀농·귀촌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10~20년의 농촌 인구는 낙관적 예상이 가능"

○ 2013년 930만 명(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인 농촌 인구는 20년 이후인 2033년에는 이 시나리오에 따라 811만 명에서 950만 명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가장 낙관적인 상위 시나리오의 경우 2023년 960만 명까지 늘어 정점을 기록했다가 이후 완만히 줄어들지만, 2033년에도 2013년보다 많은 95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연평균 0.11% 증가율을 기록)
- 중위 시나리오는 2018년까지 농촌 인구가 늘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33년에는 현재와 비슷한 929만 명 수준이 될 전망임(연평균 0.01% 감소)
- 반면 가장 비관적인 하위 시나리오에서는 2013년 이후 계속해서 농촌 인구가 줄어들어 2033년에 811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연평균 0.68%씩 감소)

3) 성주인 외. 2014.『농촌의 중장기 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2. 농촌의 장래 인구 전망

단위: 천 명

구 분		2013	2018	2023	2028	2033	연평균 변화율 (%)
상위 시나리오	읍부	4,434	4,744	4,920	5,080	5,231	0.83
	면부	4,866	4,854	4,682	4,480	4,270	−0.65
	읍·면 계	9,300	9,598	9,602	9,560	9,501	0.11
중위 시나리오	읍부	4,434	4,747	4,933	5,110	5,285	0.88
	면부	4,866	4,769	4,528	4,267	4,002	−0.97
	읍·면 계	9,300	9,516	9,461	9,377	9,287	−0.01
하위 시나리오	읍부	4,434	4,520	4,466	4,392	4,306	−0.15
	면부	4,866	4,712	4,416	4,107	3,802	−1.23
	읍·면 계	9,300	9,232	8,882	8,499	8,108	−0.68

자료: 성주인 외. 2014.『농촌의 중장기 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귀농·귀촌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구 감소 가능성 상존

○ 농촌에서 20~30대 젊은 연령층은 지금까지 순유출이 우세하였으며,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인구 고령화는 현재보다 더욱 심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기준 20.1%인 농촌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년 후 33.9~36.0%에 이르고, 40년 후에는 47.3~51.7%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농촌의 인구는 장기적으로 상위 시나리오라 하더라도 증가세를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고령인구가 압도적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농촌 인구가 사회적 증가보다는 자연감소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 시점에 이르면, 인구 유입이 활발히 일어나는 상위 시나리오라 하더라도 20~30년 후에는 농촌 인구가 현 수준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임
- 현재와 같은 중장년층 중심의 인구 유입으로는 농촌의 인구 감소를 부분적으로 늦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농촌 인구의 장기적 기반 유지에는 한계가 있음

“고질적인 고령화 문제로 인해 장기적으로 농촌 인구는 감소할 수도”

표 3.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전망

단위: %

시나리오	지역 구분	2013	2023	2033	2043	2053
상위 시나리오	전국	12.0	18.0	27.0	33.0	37.0
	읍부	13.8	18.6	26.9	35.6	40.3
	면부	25.8	32.6	42.6	52.2	59.3
	읍·면 계	20.1	25.4	33.9	42.4	47.3
중위 시나리오	전국	12.0	18.0	27.0	34.0	38.0
	읍부	13.8	18.5	26.8	35.4	40.0
	면부	25.8	33.4	44.4	54.1	60.5
	읍·면 계	20.1	25.6	34.4	42.6	46.8
하위 시나리오	전국	12.0	18.0	27.0	35.0	40.0
	읍부	13.8	19.2	28.7	39.1	44.2
	면부	25.8	33.3	44.2	54.8	62.7
	읍·면 계	20.1	26.2	36.0	46.0	51.7

자료: 성주인 외. 2014.『농촌의 중장기 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농촌 인구도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장래 농촌 인구 증감 추이에서 큰 편차 예상

○ 시·도별 성비, 출산율과 생명표를 활용하고, 코호트생잔 모형에 기초한 시·도별 이동률 값 등을 바탕으로 장래 지역별 농촌 인구를 전망한 결과 시·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대도시권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의 농촌지역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수도권의 영향을 받는 충북도 농촌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그 밖의 지역들은 대체로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부산, 대구 등은 향후 20년간 중심도시 인구가 줄어들고 오히려 농촌 인구가 늘어나는 역도시화 단계(도시화 후기 단계)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강원, 충남의 경우는 수도권의 영향을 받아 중심도시 인구 및 전체 인구 규모가 늘어나지만, 배후 농촌 인구는 줄어드는 특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표 4. 시·도별 농촌 인구 전망

단위: 천 명

시도	구분	2013	2018	2023	2033	연평균 증가율 (%)
부산	전체 인구(A)	3,426	3,365	3,304	3,164	−0.40
	농촌 인구(B)	122	133	140	147	0.14
	B/A(%)	3.6	4.0	4.2	4.6	
대구	전체 인구(A)	2,465	2,438	2,400	2,304	−0.34
	농촌 인구(B)	164	173	174	178	0.02
	B/A(%)	6.7	7.1	7.3	7.7	
인천	전체 인구(A)	2,826	2,967	3,076	3,187	0.60
	농촌 인구(B)	85	89	88	84	0.00
	B/A(%)	3.0	3.0	2.9	2.6	
울산	전체 인구(A)	1,129	1,154	1,163	1,148	0.08
	농촌 인구(B)	207	227	243	277	0.08
	B/A(%)	18.3	19.7	20.9	24.1	
경기	전체 인구(A)	12,137	12,738	13,158	13,464	0.52
	농촌 인구(B)	2,051	2,242	2,466	2,807	0.08
	B/A(%)	16.9	17.6	18.7	20.8	
강원	전체 인구(A)	1,500	1,520	1,544	1,588	0.29
	농촌 인구(B)	610	591	557	475	−0.05
	B/A(%)	40.7	38.9	36.1	29.9	
충북	전체 인구(A)	1,552	1,580	1,619	1,688	0.42
	농촌 인구(B)	624	651	658	671	0.02
	B/A(%)	40.2	41.2	40.6	39.7	
충남	전체 인구(A)	2,060	2,136	2,222	2,355	0.67
	농촌 인구(B)	1,143	1,108	1,015	843	−0.08
	B/A(%)	55.5	51.9	45.7	35.8	
전북	전체 인구(A)	1,798	1,803	1,811	1,831	0.09
	농촌 인구(B)	581	548	499	396	−0.08
	B/A(%)	32.3	30.4	27.5	21.6	
전남	전체 인구(A)	1,761	1,749	1,736	1,737	−0.07
	농촌 인구(B)	1,062	1,042	974	836	−0.06
	B/A(%)	60.3	59.6	56.1	48.1	
경북	전체 인구(A)	2,641	2,644	2,648	2,651	0.02
	농촌 인구(B)	1,279	1,216	1,116	915	−0.07
	B/A(%)	48.4	46.0	42.1	34.5	
경남	전체 인구(A)	3,255	3,316	3,345	3,347	0.14
	농촌 인구(B)	1,189	1,211	1,152	1,034	−0.03
	B/A(%)	36.5	36.5	34.4	30.9	
제주	전체 인구(A)	570	605	629	661	0.75
	농촌 인구(B)	163	161	154	135	−0.04
	B/A(%)	28.6	26.6	24.5	20.4	

자료: 성주인 외. 2014. 『농촌의 중장기 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속적인 귀농·귀촌 증대를 위해서는 농촌의 가치 보전과 정주환경, 일자리 등의 개선이 필요

▫ 귀농·귀촌은 선진국에서도 꾸준히 지속된 사회 현상

○ 다수 선진국들은 1970년대에 농촌으로의 순유입이 우세한 역도시화를 경험하였으며, 그 이후는 경제 여건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국가마다 농촌 인구 추이는 편차를 보임

- 1980년대는 이전의 역도시화 추세가 다시 역전되어 향촌형 인구이동이 둔화되거나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우세하게 변화
- 1990년대 이후는 일관된 패턴이 없이 국가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위스, 아일랜드, 스페인 등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도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반면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오히려 농촌 인구가 감소

○ 인구 증감 여부와는 별개로 귀농·귀촌은 여러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지속되는 현상임

- 농촌의 인구 증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순하고 고요한 삶에 대한 갈망, 내면적 풍성함의 추구와 같은 '탈근대적 가치'에 기초한 농촌으로의 이주는 선진국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현상임

▫ 지속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주민의 정주 기반과 일자리를 갖추면서 농촌만의 가치를 살리는 것이 중요

○ 우리나라도 도시의 주거 비용, 고용 불안정, 소득 감소 등 압출요인 때문만이 아니라 도시와 구별되는 농촌만의 가치를 추구하려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흐름이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양호한 정주 기반을 갖춘 동시에 도시민이 농촌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촌지역일수록 귀농·귀촌 목적지로 떠오를 전망
- 선진국에서도 자연환경, 기후, 수자원, 문화·역사자원 등을 갖춘 곳일수록 인구가 증가하는 등 농촌 인구 변화가 지역별로 편차를 보임
- 국가적으로 귀농·귀촌 추세를 이어가려면 농촌 특성을 살린 일자리를 개발하고, 자연환경, 문화, 전통과 같은 가치를 보전·활용하는 등 농촌지역의 흡입요인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4. 정책 과제

▫ 귀농인을 지역농업 승계 인력으로 육성

○ 미래 농업을 책임질 승계 인력으로 귀농인의 역할을 설정

- 귀농 가구 수가 6,541호였던 2011년에 신규 취농 인구 가운데 귀농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소 3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 바 있음[4)]
- 따라서 그 두 배에 가까운 귀농 인구가 존재하는 최근에는 신규 취농 가운데 귀농 부문이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됨

○ 귀농인이 농촌 이주 후 2~3년 동안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

- 영농자금 융자, 이사비용 지원, 단기 교육훈련 등으로 짜인 '인구 유치' 중심 정책 패키지에서 한 단계 발전할 필요가 있음
- 농산업 인턴 제도 등을 대폭 정비하고 후계농 육성 관련 시책과 연계하여, 귀농인이 지역의 농업법인에서 1년 이상 '연수 취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젊은 귀농·귀촌인을 배려하는 정책 사업 다양화·심화

○ 농촌 인구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력을 위해 젊은 귀농·귀촌인을 배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 경험과 자본 측면에서 취약한 젊은 세대에게 20-30 교육훈련, 창업자본 지원, 인턴십, 농지-주택 연계 프로그램 등에서 가산점을 부여
- 젊은 귀농·귀촌인 수요 맞춤형 사업 계획서 제출, 상담, 승인에 따른 포괄적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

> * 일본은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젊은 연령대의 취농 의향자에게 지역의 농업법인에 일정 기간(약 1년 이상) 취업하여 연수를 받고 취농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농 준비자금을 지원하는 '후계농 육성 정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 프랑스에서도 Young Farmers' Direct Payment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지역농업 승계를 위한 귀농 인력 육성 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귀농·귀촌을 사회적 경제 전략과 결합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등이 필요"

4) 김정섭 외. 2012.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농정포커스』 제13호.

농촌의 '사회적 경제' 육성에 귀농·귀촌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통합적인 농촌 정주권 육성 추진

▫ 귀농·귀촌을 농촌 지역사회 발전의 '사회적 경제' 전략과 결합

○ 귀농·귀촌 가구, 특히 자산이 적은 청장년층에게는 정착 초기에 가계의 현금 흐름이 정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

- 특히 귀농 가구는 농업 소득만으로 가계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현저하게 영세한 규모(평균 경지면적 0.44ha)
- 따라서 가계 유지를 위해 '농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농산물 가공 및 농촌 관광', '지역사회 서비스', '상업·서비스업·제조업 분야의 지역사회 내 기존 사업체' 등의 기회를 찾는 다각적 경제활동(pluri-activity) 참여 필요성이 높음[5)]

○ 귀농·귀촌 인적 자원을 농촌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하는 동시에 다각적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프로그램 도입 운영

-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에서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이 일부분 시도된 바 있는데, 이를 더욱 발전
-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육, 문화·여가,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에 귀농·귀촌 가구 구성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

▫ 농촌 이주 도시민과 기존 주민의 정주 기반을 통합적으로 확충하는 정책 수단 확대

○ 귀농·귀촌 자체에 대한 지원책을 분절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농촌 정주 기반을 효과적으로 갖추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단기적인 귀농·귀촌 지원책으로는 중장기적인 농촌 인구 기반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정주기반을 갖춘 자립적 생활권으로 농촌을 육성함으로써 농촌의 흡입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도시민의 농촌 정주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과소화·공동화되는 농촌 마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농촌 정주권 단위의 통합적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됨
- 마을사업 및 중심지사업, 농촌산업 육성 등 기존에 시행해온 각종 농촌발전사업들을 통합 연계 추진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제고함

5) 김정섭. 2014. "귀농인의 사회·경제 활동과 함의."『농촌지도와 개발』21(3): 53-89.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5년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제102호 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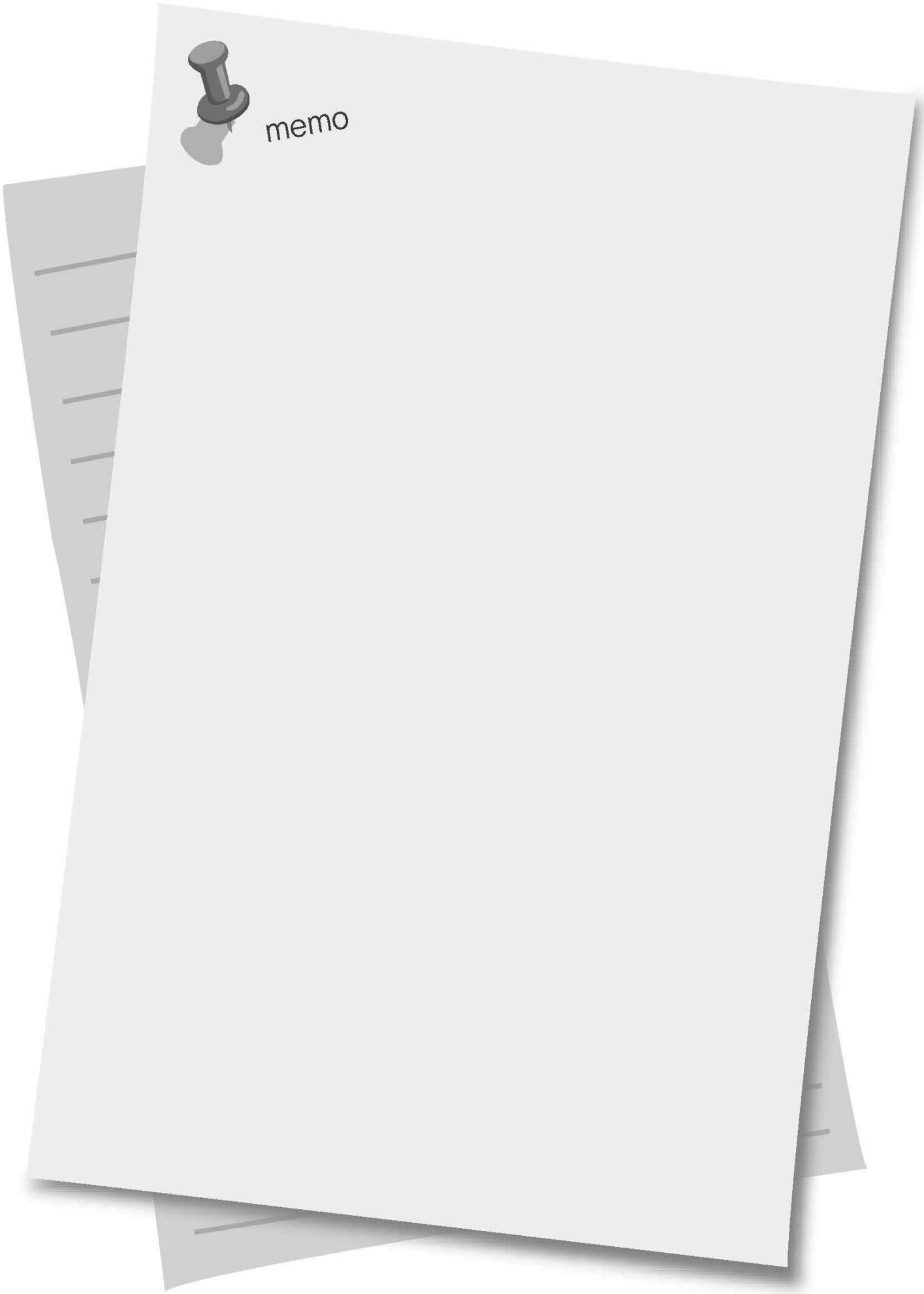
제100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제98호 한·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제97호 밭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어명근, 이병훈)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박성재)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송미령, 권인혜)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박준기, 김미복)
제89호 한·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제86호 한·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제85호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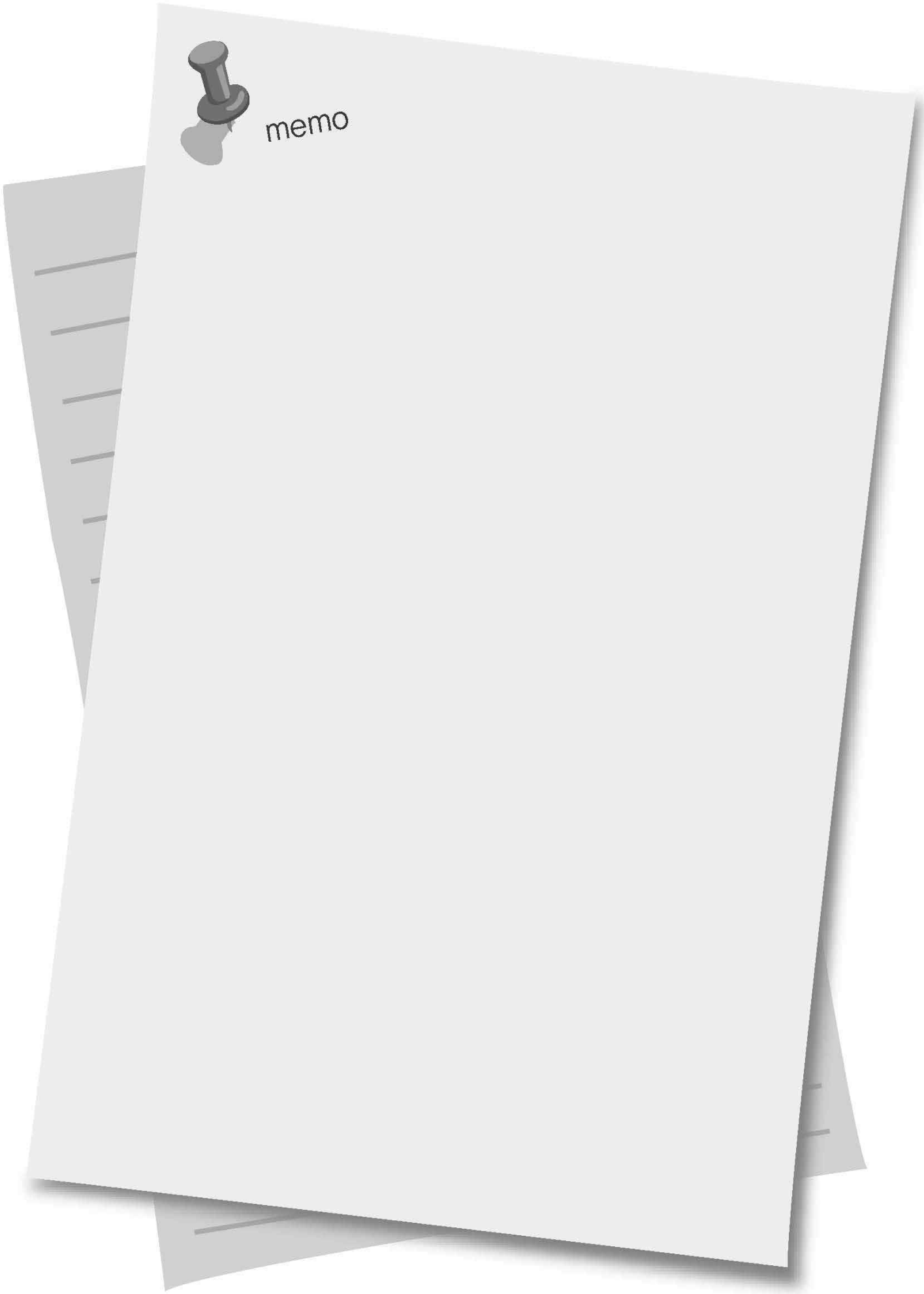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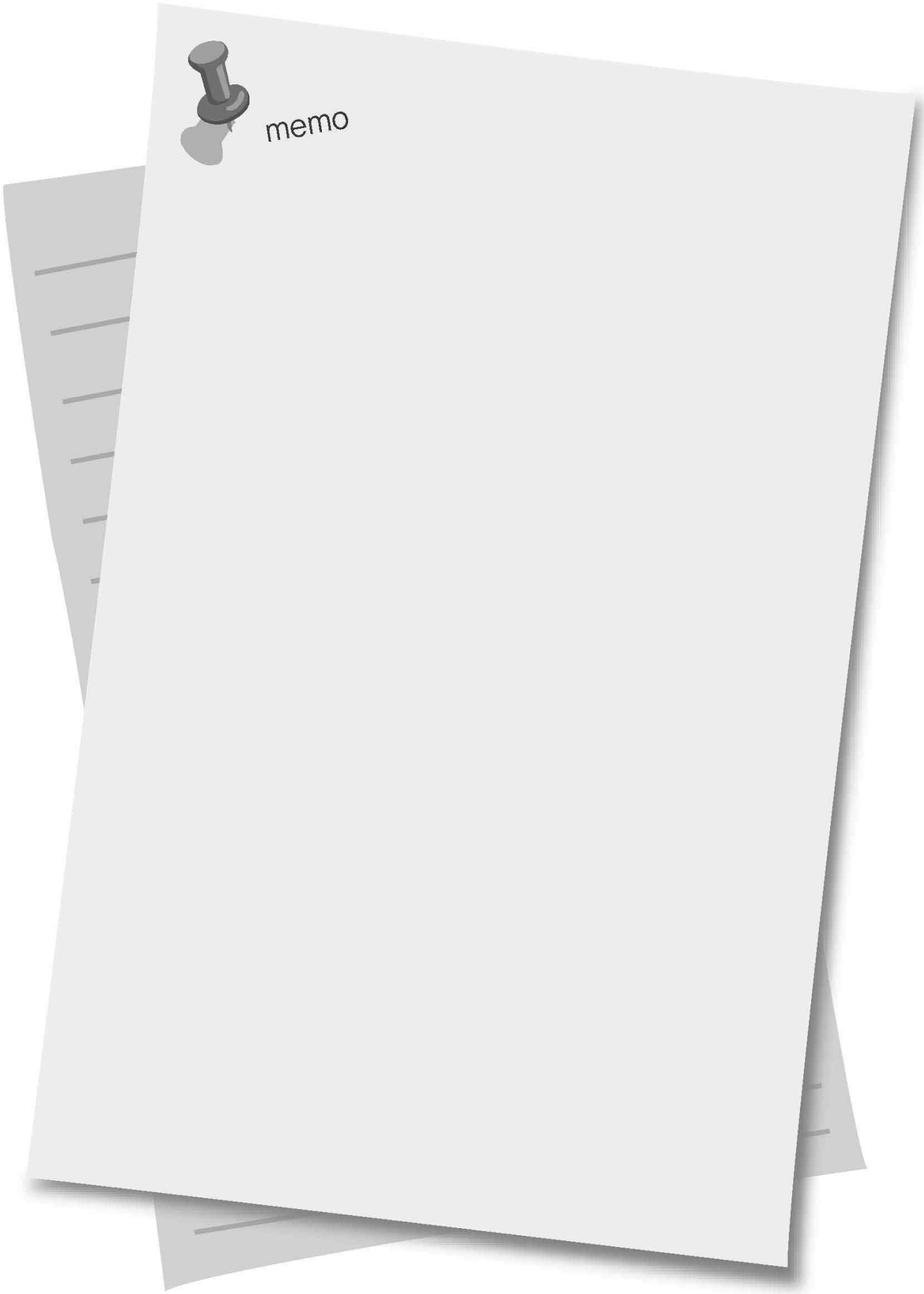
제82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제76호 해외조림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박동규, 승준호)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석현덕, 박소희)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석현덕, 안선진)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정호근, 석현덕)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제62호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제60호 창조경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웅)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송미령)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제53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김성우, 노호영)
제51호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덕, 송우진, 우병준)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현태, 박기환)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memo


memo


memo

KREI 농정포커스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5. 4. 9.
발 행	2015. 4. 9.
발 행 인	최세균
편집위원	김홍상,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우병준,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02-2269-5523~4 dec5523@hanmail.net

ISBN: 978-89-6013-738-7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